이슈 추적

暴力示威 이대로는 안된다!

- 平和的 시위문화 정착이 급선무 -

示威隊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대책은 公權力 崩壞 초래

지난 연말 농민단체 시위자 사망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임기 2년제를 보장받고 있는 허준영 경찰청장까지 그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한데 이어 경찰청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위진압 전의경들에게 「개인식별표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위문화 개선 대책을 준비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미봉책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제 정말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 〈편집자 주〉

지난 해 전 · 의경 747명 부상, 540명 경찰병원에서 치료

오죽 했으면 전·의경 부모들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쇠파이프는 합법이고, 진압봉은 불법이냐!』『죽창은 살인무기』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애끓는 심정으로 쇠파이프와 죽창, 화염병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시위현장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자식들을 대변하는 집회를 갖고 평화시위를 호소 했겠는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의경 부모들은 경찰청 앞에서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호소한후 항변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경찰의 과잉진압을 원인으로 지목해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사퇴까지 이끌어 냈던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이번 시위진압도중 죽창에 찔려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 모 상경(경기 12중대)의 아버지 김 모씨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시위대의 죽창에 찔린 아들의 눈을 보면 피눈물이 난다』며 『이제는 진짜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혔고, 당사자인 김 상경은 『저들을 막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강박관념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치를 떨기까지 했다.

이번 농민시위와 관련, 실명 혹은 골절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전·의경 숫자만 220명이고, 52명이 長短期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의경 4만 7천여명중 지난 한해 만도 747명이 시위현장에서 다쳤고, 540명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재향 경우회는 최근 「쇠파이프, 죽창을 버리고 평화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까지 발표, 『공권력이 무너지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亡國으로 가게 된다』고 입장을 표명 했으며, 국무총리실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홍콩검찰의 한국원정시위대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시사하는 바 커

최근 한 현직경찰이 청와대에 명예의 상징인 경찰모자를 반납한다며 소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위대 폭력은 바로 보지 않고 진압과정에서 빚어지는 불상사만을 들춰내 경찰을 폭력배로 몰아 경찰청장까지 사퇴하게 만든 정부에 대한 울분의 표시였다고 풀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을 둔 홍콩 사법 당국의 대처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홍콩원정 시위대가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홍콩 검찰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법률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었다.

아울러 당시 함께 시위를 벌였던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한국의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한번 몸에 밴 관행을 바꾸는 게 쉽지 않겠지만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경찰청, 신개념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경찰청은 최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개념의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 주요 골자는 현행 시위대응을 전담하던 전·의경을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 젊은 혈기로 인한 감정적 대응을 차단하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과 대원들의 진압복에도 개인식별 표시를 검토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경찰과 폭력시위대간의 몸싸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대포 활용과 더불어 방패, 방석모 등의 장비도 개선해 나가면서, 인권과 안전을 위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인권위 위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경찰만의 일방적 변화는 공권력의 붕괴 초래

그러나 시위진압부대에 대한 개선책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만 일방적으로 시위대의 요구에 따라 바뀌게 되면 공권력이 무너지게 된다. 공권력의 붕괴는 곧 국가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초래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진압대원의 과격진압이 문제라면 복면과 마스크를 한 시위대의 폭력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붉은 복면으로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진압하는 경찰만 이름을 드러낸다면 경찰의 진압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이 신개념의 선진 집회시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위대도 달라져야 한다.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죽창, 돌멩이를 가지지 않으면 진압대원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중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폭력시위 진압과정의 불상사를 두고 경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폭력시위를 진압하려 하겠는가? 뿐만아니라 경찰도 공권력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합법적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허용하되 불법시위에는 엄정대처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

複雜多難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자신들만의 의견표출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의견표출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때 만이 사회적인 지지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폭력시위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위참가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출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경찰이 선정한 폴리스 라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은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시위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가차없이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 경찰이 조금만 과잉대응하면 과잉진압이니, 폭력경찰이니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사회 각계에서 경찰을 공격하기 일쑤다.

국민전체의 편안한 삶을 위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데도 말이다. 민주국가의 경찰권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공권력인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을 무시한 폭력시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월 13일 여의도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농민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뤄짐으로서, 지난 연말 불상사가 일어났던 농민 시위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날 시위를 모범사례로 삼아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이 급선무」라는 여론 속에서 시위대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대책은 공권력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시위대와 경찰의 아찔한 대치모습)

▲ 최근 시위문화개선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개최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示威文化, 정말 달라져야 한다

손 기 태 (경기일산 경우회)

지난 11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의도 시위 당시 두 분의 농민이 사망하셨음은 지금도 정말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차분하게 서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먼저 죽창으로 공격했고(그것도 대나무 중간을 가로로 부러뜨려 끝을 여러 가닥으로 갈라놓고 얼굴의 방석철망을 뚫고 눈을 찔러 실명케 하는…), 누가 먼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러 과격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서로의 속이 풀리는 것이었습니까?

농민총연맹의 주장대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퇴했습니다. 이분들은 진정 우리경찰의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농민시위대들이 시위하던 그 시점에 하필 경찰총수의 직책에 있었다는, 억세게 불운했던 관운 이외 어떠한 작위적인 잘못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이분들은 웅지를 접은 채 자리에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농민시위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서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지난 13일~19일까지 농민총연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홍콩원정 시위시 홍콩경찰은 각목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한국과격시위대를 향해 충격탄(머리나 급소에 맞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탄환)을 6발이나 발사했고, 시위대를 연행하는 자리에서 간이수갑을 채우고 범죄자 다루듯 했으며, 항의하는 여성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 음식물을 발로 차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도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을 끼고 주는 둥 마치 "우리"에 가둬두고 소나 돼지처럼 사육하는 느낌을 들게끔 치욕스러웠다는…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공항출국장 앞에서 홍콩원정 투쟁으로 출국했던 민주노총 투쟁단 일부가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주고받은 인터뷰내용(2005.12.30. 연합뉴스 및 12.22 네이버 투데이 참고)을 보면서 세계 9위의 국력을 가진 한국민이 홍콩경찰에게 당한 이런 비인격적인 처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홍콩에서 홍콩경찰에게 당한 것처럼 만일, 서울에서 한국경찰에게 똑같이 당했더라면 지금쯤 농민총연맹과 민주노총에선 경찰의 인권탄압이라고 거세게 항의하여 경찰의 총수급 누군가가 또다시 불행하게도 애꿎게 사퇴 당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시위문화개선에 대한 희망과 비젼이 힘차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위모습도 정말 바뀌져야 합니다. 시위대원과 전·의경들 상호간의 피를 부르는 인명피해와 사회혼란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

양대노총의 절실한 문제해결의식과 정치권의 확고한 지원만 있으면 강경시위로 인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이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수준은 이미 충분히 도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진정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평등,인권,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경찰공무원법개정"경찰청장내정자에게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경찰중 84.7%가 경사 이하직으로구성되어있고, 한계급 위인, 경위 이하가 94.8%이다.경위까지 근속승진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의핵심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처럼 65% 동등한수준으로 경찰공무원 직급도 이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사기를 높여보자는 것이 경찰공무원법 개정 취지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은 경찰창설 60년사에 있어 일대획을 긋는 혁신의 전환점이라고 믿어왔다.

경찰당국에서 경사이하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가장 많이활용하고 있는 승진제도는 시험승진, 심사승진이다.시험승진은 공부에 매달려야 시험에 합격한다. 그와반대로 시험이나 심사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일하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동승진하는 제도가근속승진이다. 이번 국회에서 근속승진의 타당성과정당성이 인정되어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한 주요핵심내용은 경위까지 근속승진과 더불어 경장, 경사 1년씩종전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앞당긴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하위직으로 들어와 고생한경찰관들이 최소한 6급 상당의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경찰에 의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졌다. 치안의 수혜자인 국민이 경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주권을 가진 국민의 경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경찰에 대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기를희망하는 목소리에는 "근속승진의 원칙이 보장되어야근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발견된 것이다.

경위까지 근속승진 확대가 경찰 인사의 가장 큰혁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치안현장의 실무자인순경 응시 시험에 대학출신의 신세대 경찰의 등장과더불어 그들은 과거의 낡은 승진구조를 과감하게 개선될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인권제일주의라는 새로운 공직관을추구하는 것은 그동안 말못하고 참고 지내온 과거의기성세대 경찰관들의 의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무장공비 또는 테러등 강력범죄 진압에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군인이나 다름없는 업무를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 교사공무원 절반에도 못미치는대우를 받는 듯 했다. 이러한 직종과 동일한 대우는 해주지 못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과는 동등하게 대우를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29세내지 30세에 임용되어 50세가 지난 나이에 경위로승진된다. 그것은 일반직 6급에 오르는 16년보다 6년이 더긴 21년이라는 기간에 경위가 승진된다. 그래서 최근국회에서 발의 (6, 7, 8)형태의 근속승진 확대를 위한경찰공무원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이라고 인정되어국회의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 통과 되었다.

하위직경찰의 애환과 숙원에 대한 의견을 무궁화클럽이주도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 전달한 결과물이다. 국회에서민의를 기꺼이 수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급성을 인식 개정 법안을 마련심도있게 심의하여 이 법안을 논란 없이 통과시켜 주었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국회의원이 있었기에 하위직 경찰관들은 사기가 진작되어 연말비상근무에 열기를띄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며칠도 안되어거부권이라는 용어조차 듣기 싫은 비보를 접하고 하위직경찰은 물론이거니와 무궁화클럽 네티즌들 역시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다시 정부가 국회에요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황당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부측에서 태도를 바꾼것은 다름아닌 "소방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도 연쇄반응이생길까봐 두려워서 보완입법을 정부에서 내놓아야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소방 공무원도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평등하게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비용으로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고효율을 끌어낸다는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금까지 돈이 무서워근속승진확대를 반대한다면 노동자와 다름없는 하위직경찰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최일선 주민들 생활 속에서 근무하는하위직경찰관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가전혀 다르다. 유사시에는 전투복을 입고 군대와 다름없는특수임무를 띄워야 한다 지금까지 무궁화클럽의 입장을요약하면,

첫째, 경찰의 잘못된 직급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반직은 7급 이하가 46%, 6급이상 54%이다. 그런데경찰은 전체경찰중, (8급) 상당의 경사이하가 85%이고 한계급 높은 경위이상에 해당하는 직급이 15%이다. 일반직은 9급으로 들어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6급이상으로 승진하지만, 경찰은 순경으로 들어와 직급구조의모순으로 인하여 일반직 8급에 해당하는 경사이하로 68% 퇴직하여 재직시에는 월보수에서, 퇴직시에는퇴직금에서, 퇴직후에는 연금등에서 수억원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직은 9개 직급인데 경찰은 11개로 인한계급구조로 인해 하위직경찰의 승진적체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경위와 경감을 6급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중 6급에 해당되는 2개의계급이 붙어있는 있는 공무원은 경찰밖에 없다. 모순된이러한 경찰 계급은 일반직은 6급까지 평균승진기한이 16년 걸리지만, 경찰은 승진에 한번도 누락되지 않고 승진한다 해도 경찰은 6급인 경감까지 27년 소요되는계급체계의 원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하여항상 경찰이 승진, 보수,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공무원보다경제적, 신분적, 사회적 불이익을 창경 60년동안 이어져왔다.

셋째, 경찰의 상징이다. 경찰을 단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에서는 소방관과 교도관들과 비교하는데 있어 무궁화클럽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 개개인은 검찰, 국세, 관세청 공무원들과 같이 최일선 법집행기관이다. 경찰은 사회의 각종 중요한 현안에 대해 대처해야 하고 때로는 판사, 검사, 목사 등 성직자보다높은 고도의 윤리성에 의해 법집행을 요구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담당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체 공무원이 시행중인 "대우공무원제" 경찰은 제외되었다. 15년전인 90년도부터 일반공무원은 기본급의 6%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경찰은 제외시켰다. 정부는 경찰에게 3,200억원의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경위까지 근속승진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56억원에 불과한것으로 알고 있다.그 러나 경장, 경사 근속승진 1년단축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 항간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6천억원이라는 숫자가 등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끝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6급형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변화시키려면 아래 직원들을 부려먹으려는 사고와 경위계급이 감독자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개정된경찰공무원법이 조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무엇보다 법을 만들고 국민의 뜻을 의결하는 국회가존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회장 · 한국마약범죄학회장전경수 경민대학 노철환 교수 등 임원진 일동 (011-307-6934 drugcci@yahoo.co.kr)